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제 2017년 도입

준공영제 개선방안 확정 비용줄어 업체 반발 예상 미사용 인건비 전액 환수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확정, 2017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부터 시내버스 표준연비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실제사용량 지급 방식에서 표준연비제를 도입한다. 표준연비제는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운행속도, 승객, 정류장, 교차로 등 운행환

경을 고려해 산정한 노선별 표준연비에 따라 연료비를 주는 방식이다. 내년에 용역과 내부 검토를 거쳐 2017년 말부터나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연비제 시행 지자체는 공영제를 운영중인 6개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료비 절감은 기대할 수 있지만, 비용이 줄게 돼 업체나 운전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비 및 관리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 적정인원을 산정한 뒤 차등지급한다. 그동안 인건비 미사용액은 업체 자율운영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미사용 인건비는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임원 인건비 최소 한도액은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내렸다. 차량 정비비는 저상, 대형 등 차량 형태

별로 차등지급하고 차량보험료는 표준연비도 범위 안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준다. 업체에 지급하는 성과이윤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향(50%)해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연료비 지급 총액은 392억원으로, 시는 여기에서 표준연비제 절감액 20억원 등 모두 30억원(연간)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비 절감만을 강조할 경우 에어컨 미사용 등 서비스 질 하락, 운전원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 적정이윤이 기본이윤에 성과이윤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총액은 그대로 뇌든 채 성과이윤 비율만을 높일 경우 성과 하위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시는 또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버스후면, 손잡이 광고 개발 등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와 정산 강화, 준공영제 운영현황과 운송수입 등을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 투명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5년간 광주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원한 재정규모는 모두 18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감사원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부적절한 이윤 산정과 복리후생비 등 표준원이 과다 산정 등으로 수습여원의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새정치 시장 연말 당정협의회 취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시간 연말 당정협의회가 취소됐다. 광주시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애초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장에서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과 송년 모임 성격의 당정협의회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시장은 최근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지역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2명이 이미 탈당을 선언했거나 앞으로 3명의 의원이 추가 탈당을 검토하면서 송년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철·임내현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고, 주류 측인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권은희·박혜자·장병만 등 나머지 의원 3명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피켓 전달하는 평화나비 학생들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려대 평화나비 학생들의 메모가 담긴 크리스마스 피켓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2배 인상 반대”

광주시의회 ‘달빛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도

광주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이름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31년만에 4차로로 확장 개통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름 때문에 정부와 지역

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영남과 호남을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동서회합’의 상징적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동서회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동맥이 ‘광대(광주-대구) 고속도로’가 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2배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는 죽음의 도로를 겪었던 국민의 비용과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의회는 “달빛고속도로를 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다면 광주시민, 대구 시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9개 시·군 주민이 뭉쳐 의지를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별(대구), 빛고을(광주)의 첫글자를 딴 ‘달빛 고속도로’로 명명하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광주와 대구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두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다문화가족 지원 컨트롤타워 출범

‘지원 시책위원회’ 공식 활동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시책위원회’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는 시·시교육청·출입국관리사무소·국제교류센터·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이주여성, 시의원, 변호사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며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회복지과), 외국인 근로

자 권익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회통합추진단), 외국인 교류협력(국제교류담당관실), 외국인 의료서비스(건강정책과), 외국인 자녀 교육(교육청) 등 주제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내년 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0억 5000만원) ▲국제교류센터 운영(4억 50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2억8400만원) 등 20건, 27억4000여만 원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 광주의 다문화 가족은 전체 인구 약 147만7000명 가운데 0.38%인 5540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7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587명), 필리핀(5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대통령 표창

전국 최초 8년 연속 우수광역단체에 선정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8년 연속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진기록과 영예를 안게 됐다. 노사민정의 화합과 결속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산업평화 안전지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과 22개

시 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운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으며,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 받았다. 최중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협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도민 소득증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정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광역치매센터 성가롤로병원에 개소

매년 운영비 4억 지원

전남지역 치매 발병률 저감 및 예방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도광역치매센터가 23일 성가롤로병원 별관 1층에서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공모에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설치비로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매년 운영비 6억원 가운데 4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역치매센터 규모는 모두 465㎡로 세미나실, 사무실, 홍보관 등 9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정책기획팀, 자원연계팀, 교육홍보팀으로 9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종합적인 치매관리에 나선

예정이다. 그동안 치매사업은 각 시·군 치매상담센터 중심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환자 등록 위주로 펼쳐왔으나, 조기 진단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검진 기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관 부재 등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치매노인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남지역 치매 유병률은 11.1%로 전국 평균(9.6%)보다 1.5%포인트 높다. 치매노인 수는 4만 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원·시설 입소, 보건소 등록 등 관리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절반에 불과하다. /윤현석기자 zachadol@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 KTX 5분거리
- ▶ 광주시청 10분거리
-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 무안공항 원할
-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